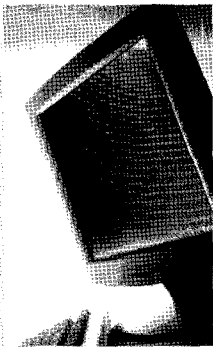




— 경영가이드



- 中企 적합업종 선정과 中企人的 책임
- 금리인상에 말문 닫은 중소기업
- 美·中 경기논쟁으로 본 한국경제
- 내수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길
-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 법률 제정에 앞서
- '녹색'은 위기이자 기회다
- 지역인재 유출 방지책 서둘러야

중소 적합업종 선정과 중소인의 책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는 보유 경영자원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시장에 자금력과 정보력이 월등한 대기업이 진입하는 경우에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그 결과 다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쟁상 불리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이 일찍부터 대두됐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는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절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말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종 및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합업종으로 시장실패 보완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학자들은 ‘특정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인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가 당연히 경쟁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반 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질서가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동시에 이는 중소기업이 경쟁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대량실업의 발생과 같은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존립해 오던 다수의 중소기업이 축출되고, 그 결과 새로운 독과점시장이 형성되는 등 반 경쟁상태가 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도 고려해야

적합업종 선정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지 않고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할 것이다. 적합업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보호의 틀 속에 안주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등한히 함으로써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값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는 안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하면서 '단순히 기존 중소기업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합업종 선정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휘와 적극적인 혁신활동 및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책임이 있다.

끝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대기업의 진출 및 확장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용' 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강제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정 중심 사회에서 한 단계 발전해, 관련 경제주체들이 합의해 원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는 소위 '원칙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합의된 룰에 대한 자율적이고도 성실한 실천이 뒤따를 때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병선

송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금리인상에 말문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10일 회의 직후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합법적으로 인상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더 상승할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지만, 금리 인상 부담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과 가계는 힘이 없다 보니 말문을 닫고 있다.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미국 경제가 5월까지도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및 연방은행의 1차 및 2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연방준비은행 버냉키 의장이 동시에 느린 미국 경기 회복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경기부양에 이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 차입규모 한도가 팍 차서, 국회가 한도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날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한국경제의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경기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 즉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분석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경제는 수요요인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인상 필요성 높지않아

한국의 공급요인과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자재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는데,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가의 산업화로 인해 원자재 자격이 종류에 따라 지난 4~5년 사이에 2~4배까지 상승했고,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이 지나면서 원유 가격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겨울철 채소 생산이 감소해 올랐던 농산물 물가는 계절이 바뀌면서 안정 수준으로 바뀌고 있어, 물가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요인의 변화로 소비자물가 수준은 올해 3월~5월까지 120.4로 동일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물가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물가도 3월에 4.7%로 최고로 상승한 이후 5월에는 4.1%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물가지표를 보면,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수요 억제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금리인상을 사용한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금리인상시 中企부담 고려해야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수입 원자재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집중적으로 가공해 생산하게 되는데, 수요량이 적어 원자재 가격에 협상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의 조달청, 지경부 등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 정책 수단을 이용했다면 이는 감독당국과 금통위의 책임 회

피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따른 거래'도 짜고 있는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금통위의 금리인상이 금융권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 증가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결정 구조와 달리, 아쉽게도 한국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상황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없다.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게는 올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희소식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美·中 경기논쟁으로 본 한국경제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내에서는 경기논쟁이 일고 있다. 양대 수출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 두 국가의 경기논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

상된다.

올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경제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온 것을 계기로 미국경기는 지난해 8월 이후 거세게 불었던 '더블 덩'과 '소프트 패치' 간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더블 덩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소프트 패치란 경기가 승승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은 1분기 성장률과 단기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을 계기로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베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올 1분기 성장률과 최근 지표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소프트 패치론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회복국면에 다시 진입한다는 시각이다. 6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7~2.9%로 하향 수정했지만 1분기 성장률이 1.8%인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이후에는 3% 이상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서 경기둔화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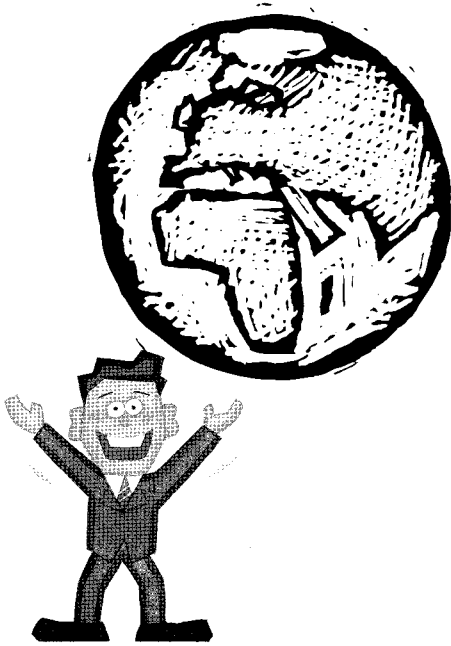
특히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 미국경기가 더블 덩에 빠지느냐 아니면 소프트 패치로 갈 것인가 여부는 달러계 자금 등 외국인 자금동향을 읽는데 중요하다. 장기침체를 의미하는 더블 덩으로 간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소프트 패치로 가 미국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복귀한다면 외국인 자금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심국인 중국경제는 현재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외연적 성장단계란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초기 단계로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통해 성장하는 국면을, 내연적 성장단계란 시장경제 도입 등을 통해 생산요소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성장하는 단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당면한 '차이나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기준금리, 재할인율 등 정책금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왔다. 하지만 자산거품과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강력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착륙은 지나치게 과열된 경기를 안전하게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착륙은 경기가 급속히 냉각돼 소비가 줄고 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상황별 대처전략 마련해야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논쟁을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최상의 시나리오인 ▲미국경기 소프트 패치와 중국경기 연착륙, 최악의 시나리오인 ▲미국경기 더블 덩과 중국경기 경착



때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경영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놓는 것이 하반기를 맞는 국내 기업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지 않나 생각한다.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길

록, 그리고 과도기 시나리오인 ▲미국경기 더블 딥과 중국경기 연착륙 ▲미국경기 소프트 패치와 중국경기 경착륙이다.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면 성장률 4.5%,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 이상이 가능해 보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진다면 각각 3.5%, 1,9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도기 시나리오로 간다면 성장률과 주가는 현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고 각종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 3분기부터 미국경기는 더블 딥보다 소프트 패치, 중국경제도 당면과제인 프로메스적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흡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는 예측기관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세계와 우리 경제 앞날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그때그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2%가 증가해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고, 상용직 고용이 증가해 고용의 질 또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 환경과 경제의 속살을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회복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주요 경제권의 더딘 회복, 그리스 등 불안정한 국제금융 환경, 위험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심각한 청년실업 등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먼저 고용상황을 보면, OECD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로 이는 미국·일본·호주 등에 비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평가된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7.3%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여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통계치 모두 20대를 제외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의 성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지난 분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 불균형 심화

성장 중심 경제의 장점이자 기본 전제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에 의해 소득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데 있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게 된다는 경제이론이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및 원부자재 해외구매 등과 맞물려 전통적인 트리클다운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상당기간 동안 높게 유지된 환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제고시키고, 내수 중심의 기업에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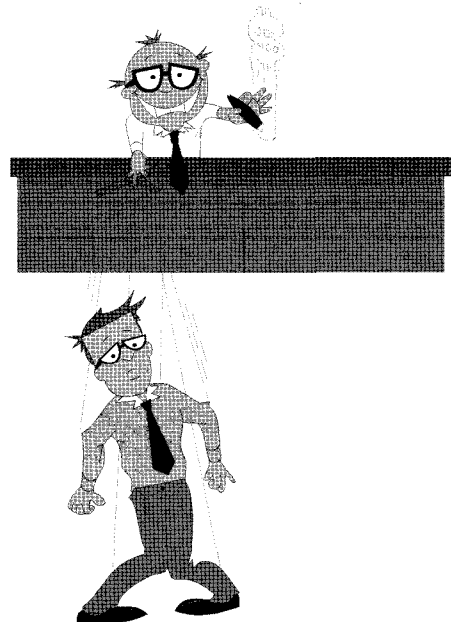
지난 5월에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1월부터 감소추세이고, 향후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개선 통해 내수진작해야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800조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는 1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이고 OECD 평균(13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가계가 빚이 많아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돼 이자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최근의 가계동향조사는 1분기 가계소득은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보다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지출은 4.7%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이 6.1% 증가해 소비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계는 물가상승과 소득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과 물가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켜 서민의 실질소득이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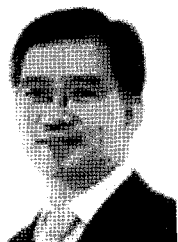
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동반해 소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위적인 어떤 내수활성화 노력이나 그 효과도 일정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같은 부문간 불균형과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분발을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규모소매업 거래공정화
법률 제정에 앞서**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불공정에 관한 논란이, 최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각

각 대표 발의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형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법안의 국회통과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 법률안은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감면과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반품, 부당한 인력과건 요청, 배타적 거래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부규정으로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있지만, 고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강화해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있어서는 불공정 거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어찌하다가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을 코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을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문하게 된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신유통업체의 등장과 유통업체 규모화 등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규모화 경쟁과 그 시장점유 비중이 커지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판도 변화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불공정 논란

제조납품업체와 유통업체의 거래에서 교섭력이 대형유통업체로 옮겨 가면서,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커져 온 것이다.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논란은 거래 교섭력

우위가 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유통 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그 시장점유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한 위 두 법률안은, 그러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두 거래주체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거래를 잘 한다고 하면, 비록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큰 제약을 받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유통시장에서의 납품거래의 공정화를 이루고, 보다 성숙된 거래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정될 법률 내용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되,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나 제재로 인해 소매유통의 시장기능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공정거래가 최선

시장 주체들의 자율적인 시장거래 환경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의 우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최대한 바로잡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시비는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기적으로 대규모 소매업체의 거래에 관한 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 시장 거래실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로 불공정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동안의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논란이, 거래를 하는 주체들이 당연히 서로 득을 보기 위해 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법률 제정과 규제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장의 거래주체들 간에 충분히 상생을 위한 자율조정이 될 수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인 것이다.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가 된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에서도 공정한 거래는 거래주체들의 성숙한 기업경영과 거래행위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라는 국가적인 캠페인 없이도 시장에서 시장주체들의 공정거래를 위한 역할 수행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녹색'은 위기이자 기회다



전 세계가 '그린' 물결에 출렁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모든 나라의 공동 관심사가 돼었고, 온실가스 규제와 환경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이 그린의 도전에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녹색경영에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에는 그 영향이 지대하다.

세상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 압력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중소기업은 기가 죽기 쉽다. 그러나 이를 선용해 녹색화를 진취적으로 추진한다면 기업체질의 강화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호기가 될 수 있다. 도도히 다가오는 녹색 쓰나미에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먼저 사업장 내의 녹색화에 착수해야 되겠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약을 잘하는 기업이 녹색경영의 승자가 된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풀고,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며, 자동 소등 센서를 부착하는 일부터 착수하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 구성원의 녹색 의식을 고취하고, 공정과 제품의 녹색화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녹색물결 가운데 선 중소기업

다음으로 대기업의 '녹색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나 '대·중소기업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파트너십 사업이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진단하고, 기술개발, 공정개선, 설비확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으며,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로, 국내외의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활용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창업 선도대학'을 지정해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해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공정에서 청정에너지 활용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인의 강인한 녹색의지와 그 추진력이라 하겠다.

녹색화는 생존 필수조건

넷째로, 기술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니치마켓을 파고들거나, 블루오션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휴대폰이 등장하자 유선전화기 설자리를 잃고 있다. 전기철도가 증기기관차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10년 안에 가솔린 자동차가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지금부터 업종전환을 비롯해 생존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업종이 쇠퇴기에 있거나 구조조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녹색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감행해야 될 것이다. 대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개발에 매달릴 때, 한번 충전으로 100km를 가는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해 유럽시장을 개척한 중국의 한 지방중소기업(浙江長鈴)의 예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인증, ISO 26000, 환경표지 등 각종 환경 관련 인증을 받음으로써 녹색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키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증비용 등이 부담되겠지만, 인증을 받은 뒤의 효과가 더 클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대표적인 인증제도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기업의 평판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녹색마케팅을 펼칠 호기도 맞게 된다.

이제 중소기업의 녹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경쟁력 있는 녹색 중소기업의 대거 출현을 기대해 본다.

최용호

(사)산학연구원 이사장

지역인재 유출 방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고급인력 부족이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 특히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기술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하다보니 지방에서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이 쉽지 않고, 또한 어렵게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애로를 많이 겪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방 고급인력 부족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지방 고급인력 부족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고급인력의 유출이다. 이러한 고급인력의 유출은 두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더불어 고급인력의 유출이 발생한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지방대학을 마다하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한다.

과거에는 지방에도 우수한 대학들이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격차

이렇게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며 지방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방 고급인력 유출의 두 번째 단계는 지방에서 양성한 고급인력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단계이다.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력양성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 가운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인력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력이 쌓인 고급인력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직으로 인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업활동에서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아예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지방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지방 정주여건 향상시켜야

그렇다면 고급인력의 수도권으로의 유출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수도권과 지방의 정주여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즉, 수도권에서 사는 것이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직장은 물론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문화시설 등 ‘좋은 것’들이 서울에 집중해 있다. 고급인력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 자꾸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서 살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저절로 재산도 형성된다. 보편적인 사람이

라면 좋은 것들을 향유하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재산형성도 할 수 있는데 왜 지방에 머물렀는가?

지방소재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고급인력을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에서 고급인력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많지 않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지방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 지방에서 살아도 수도권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향유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지방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고급인력은 지방에 남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지방에 거주하는 유명인사들을 볼 수도 있고, 지방에 본사들 둔 세계적인 기업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